

G-Welfare Weekly Report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노동개혁 3대 입법과제'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영향

01 주요 내용

-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노동개혁을 위한 주요쟁점인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을 국회 입법과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구분	내용	주요 쟁점
통상임금	통상임금 규정 및 범위의 명확화 → 법률에 명시	(노동계)휴가바김장보너스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 (정부)고정성이 없음으로 제외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 포함 주당근로시간 범위 → 현행 1주당 68시간(40+12+16)	(노동계) 1주당 52시간(40+12) : 휴일연장 근로 중복할증 가능 (권성동의원) 1주당 60시간(40+20) :휴일 근로 삭제(중복할증 불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현행 2년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연장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원할 경우'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

0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복지사업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해 연장근로 제한에 특례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본 개혁안의 적용에서 제외됨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또한 각 사군구의 예산 범위 내 지급여부가 달라지므로 '휴일 근로의 중복할증 제외'라는 개혁안에 따른 수당금액의 하락은 없음
-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2조' 특례적용을 폐지하여야 함
- '통상임금' 과 관련하여 복지시설은 '연봉급제(기본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 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결정되어 모든 시설에 준용됨으로 '통상임금범위가 명확'하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도 큰 영향은 없음
-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약 18%에 달하며 이들 중 35세 이상의 경우, 고용관계를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 비정규직의 95%는 이용시설에 종사하고 대부분 단위사업(노인일자리사업 등) 수행인력으로, 호봉 승급 없이 인건비가 고정되어 있어 고용관계를 4년으로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음

2. 2016년 예산안,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22조 9000억 원 배정

01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가 386.7조 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발표, 복지 분야는 122.9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8%를 차지하여 역대 최고 수준
 - 전체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3%로 2010년 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총수입(391조 5000억 원) 증가율이 지난해(3.5%)보다 1.1%포인트 낮아 재정적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예산	237	257.1	284.5	292.8	309	325.4	341.9	355.8	375.4	368.7
복지분야	56.1	61.7	67.8	73.9	78.9	84.8	88.7	97.2	115.7	122.9

*단위: 조원

- 내년도 예산편성안의 핵심은 청년희망, 문화융성, 민생안정이며, 복지 영역에서는 생애주기 별·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 강화, 감염병 예방 등의 기능 강화에 초점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지원수준이 각각 2.4%, 1.4% 인상되고, 임플란트, 틀니 등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및 근로지원인 확대,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지급 등 돌봄 관련 사회서비스도 확대 예정

구분	'15	'16안	증가율	비고
기초생활보장	94,773	101,305	6.89	· 생계급여(26,988 → 32,728)
공적연금	396,612	427,073	7.68	· 국민연금 급여(165,875 → 185,488)
보육가족여성	54,278	55,571	2.38	· 양육수당(11,018 → 12,192) · 보육교직원인건비 등(6,746 → 7,794)
노동	155,162	172,920	11.44	· 구직급여(41,084 → 51,228)
보훈	46,376	47,404	2.22	· 보훈보상금(23,435 → 24,539)
주택	183,867	192,943	4.94	· 행복주택(10,454 → 13,211)
노인청소년	90,362	93,890	3.90	· 기초연금지급(75,824 → 78,692)
취약계층	23,688	24,886	5.06	· 장애인활동지원(4,679 → 5,009)
보건	104,010	104,918	0.87	· 감염병 대응(4,118 → 5,476)
사회복지일반	7,697	7,916	2.85	· 지역자율사회서비스 투자(2,136 → 2,337)
합계	1,156,824	1,228,828	6.22	6.2% 증가

*단위: 억원, %

- 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으나 연금과 같은 법적 복지의무지출 자연증가분이 증가액의 절반가량으로 사실상 '제자리 예산'이라는 지적
 - 구직급여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났으나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에 노사정이 합의할 때만 유효한 예산이며, 구직급여를 포함한 4대 공적연금 증가분만 약 3조 원으로 증가액의 42.3%를 차지하고, 노인 인구가 늘면서 기초연금도 자동으로 증가
 - 특히,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지난해에 이어 논란이 예상 ※ 정부는 '무상보육·보육에 대한 비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의무지출 범위에 명시' 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9월 9일 입법예고한 상황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16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경기도의 주요 사업은 평택·당진항 항만개발, 제2판교 조성, 케이컬처벨리 조성, 경원선 복원 등 SOC 사업이 대부분이며, 유사·중복, 재정사업 원점 재검토 등 정부의 복지재정효율화 정책과 맞물려 경기도 차원에서의 복지 정책 추진의 제약 및 예산 편성이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
 -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복지 및 사회서비스의 경우, SIB 등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자원의 다각화 노력 필요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지역화폐가 뜬다

1998년 처음 국내에 도입된 지역화폐가 최근 지역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며 인기를 얻고 있음

- 지역화폐는 1983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녹색달러’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으며, 1990년 대에 호주,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됨
- 국내에 도입된 지역화폐는 50여개이나 현재 30여개가 활용되고 있고, 민간 주도에서 점차 지자체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
- 최근 동향 및 대표 사례

경기도	과천 품앗이 지역화폐 ‘아리’ : 2000년 11월에 설립되어 현재 활동중인 회원은 150명 정도이고 카페 가입자 수는 1,000명 규모. 회원은 주부들이 대부분이며 교육, 아이돌보기, 상담, 집수리, 청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음
	성남, 생활임금제 초과분에 대해 ‘성남사랑상품권’ 지급 : 2006년 지역화폐 20억 원을 발행하였고, 2009년부터 연 1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현재 가맹점 수는 7,900여 곳에 이르고 있음
	수원시민화폐본부, 시범운영 끝내고 본격 가동 : 수원에서는 100여명의 주민들이 작년 9월 출범식 이후 6개월 간 시범사용을 진행함. 수원시민화폐는 이용자들이 추진본부에 돈을 입금한 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의 지역화폐
서울	서울 e 품앗이 : 2010년 11월, 노원, 양천구의 시범사업 후 현재 13개 자치구가 운영하고 있음. 돌봄, 학습지도, 상담, 수리, 이미용 등의 품과 식품, 의료, 도서, 장난감 등의 물품이 거래됨
대구	대구 지역화폐 ‘늘품’ : 2005년 본동종합복지관 내에서 운영을 시작하여 대구 달서구 주민을 중심으로 2014년 기준 760명의 회원을 보유. 도시락배달과 물품 판매 등에서 화폐를 받을 수 있음
인천	강화군, ‘강화사랑상품권’ 판매처 확대 : 2014.12월부터 8월까지 15억원 어치가 판매되었으며, 전통시장은 물론 음식점, 주유소, 슈퍼마켓, 이·미용실 등 1,4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됨. 소비자는 3%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
대전	대표적인 지역화폐, 한밭 레츠의 ‘두루’ : 2000년 대전지역 70여가구로 시작해 현재 680여 가구의 회원을 보유함. 의료협동조합, 약국, 카센터, 사진관, 음식점, 수화학원 등 2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강원	강원도, ‘강원화폐’ 발행 추진에 난항 : 연간 4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유통을 위해 지 2014년 6월 ‘강원도 지역통화 유통방안 공청회’를 실시. 올해부터 시범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예산 문제로 답보 상태임
전북	전주시, 지역화폐 ‘온’ : 지역 화폐를 총 6,000만 원을 발행하고, 농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 교육문화 체험 등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복지기관 및 시설 등 동향

기관/행사명	주요내용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출범식 및 심포지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 9. 17.(목) 14:00 장 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경기홀 대 상 : 경기도 내 사회복지관계자 및 내외빈 700명 ※ 문 의 :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032-683-4486)

03

FACT CHECK

고용복지+센터, 행복한 고용과 복지의 연계인가?

-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정부 3.0의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20개소, 2017년까지 70개소 예정
- 고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활센터를 비롯 해당 지자체의 일자리 관련기관이 한 공간에서 일자리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 현재 4,231건 서비스 연계가 이뤄졌고, 취업실적은 전년 대비 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일자리 관련기관의 공간적 통합은 이용자 측면에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통합성과 신속성 개선에 효과가 있음
- 그러나, 고용과 복지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

대상자 미스매치 문제 : 센터 이용자의 대부분은 고용에 대한 욕구를 가진 차상위 이상의 소득대상자 다수를 차지함. 때문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담당하는 복지팀이 고용복지+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기는 어려움

차상위층의 취업을 제고 효과가 불명확 : 고용복지+센터의 주된 목적은 탈빈곤, 탈수급으로, 2014년 남양주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한 수급자의 6.1%가 탈수급하였으나, 실제 차상위 자활종로나 사망, 연령초과 등의 비자발적 요인의 탈수급이 42.9%를 차지함. 고용복지통합적 제공을 통한 탈수급 지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

- 고용복지+센터가 중앙과 지자체 사업이지만, 도 차원에서도 사업의 효과검증,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한 경기도 고용복지+센터의 특색마련이 요구됨
 - 일자리센터와 복지부서간의 연계 강화와 취약계층의 탈수급지원을 위한 교육훈련과 일자리 알선사업이 필요함. 일자리센터와 자활을 중심으로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지원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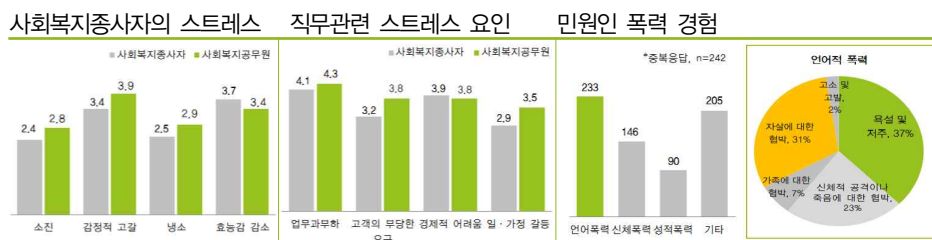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남양주의 경우, 복지서비스 수혜자 843명 중, 센터 내에서 연계된 대상자는 절반(49.8%)에 그치고 있음

04

통계로 보는 복지

사회복지종사자의 스트레스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1),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및 사회복지공무원의 스트레스 소진 극복방안 기초연구.

- 사회복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복지종사자는 효능감 감소(3.7), 사회복지공무원은 감정적 고갈(3.9)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직무관련 스트레스 요인은 업무과부하가 가장 높았으며, 낮은 처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임
- 사회복지공무원의 민원인 폭력 경험은 언어폭력(233건)이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은 욕설 및 저주가 37% 차지하였음
- 사회복지종사자의 스트레스·소진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도입 및 조직차원의 대처, 고객 또는 민원인 응대에 대한 교육 강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등이 요구됨

*자료 : 경기복지재단 (2014).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 폭력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